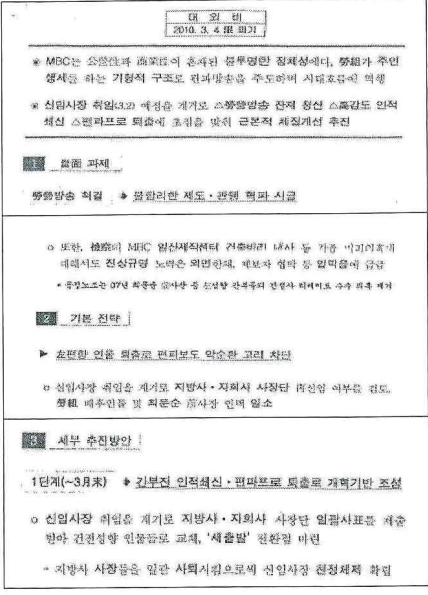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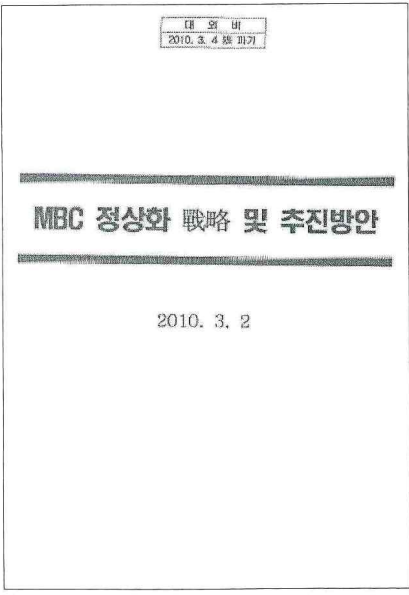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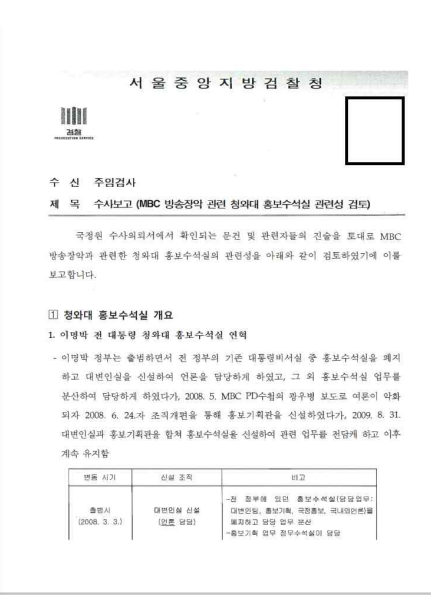


# “이동관 홍보수석실이 MBC 장악 문건 지시”

##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 공개 국정원 직원들, MBC 문건 “홍보수석실 보고”

“요청한 적도, 보고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.”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측이 최근 공개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 언론에 밝혔던 입장이다. 하지만, 이 같은 입장과는 정반대로,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방송장악을 위한 각종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, 실제 실행했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내부 진술과 검찰 수사 보고서가 공개됐다.



### 검찰 “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 통해 방송사 장악 계획”

7월 5일자 경향신문은 지난 2017년 11월 5일,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작성한 ‘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’라는 수사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. 이 보고서에서 검찰은 2010년 3월2일 국정원이 작성한 ‘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’이란 대외비 문건에 대해 “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”고 명시했다. 그러면서, “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,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·피디·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, MBC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”고 밝혔다.

앞서 큰 논란이 됐던 ‘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’이란 문건에는 MBC 간부진을 비롯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진 교체, 노동조합 무력화 및 조직 개편, 소유구조 개편 논의 등 정권의 MBC 장악 시나리오가 자세히 담겨 있다. 여기에는 손석희, 김미화 씨 등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‘문제 진행자’로 규정하고, ‘반드시 교체한다’는 내용까지 기재돼 있다. 심지어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나눠 세부 추진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. 그리고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은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그대로 시행됐다. 실제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정보수집관이었던 A씨는 문건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고 “족보대로 가는구나 생각했다”고 검찰에서 진술했다.

## 국정원 직원 “족보대로 가는구나”.. “이동관과 김재철이 엄청 친한 사이”

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문건을 작성하는 데 참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입을 모아 “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되는 문건”이었다고 진술했다. MBC 담당 정보수집관 A씨는 “이 문건은 원래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”이라며 “홍보수석 이동관은 이 문건을 한 번 보고 버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MBC에 전달하여 정권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친정부적인 사람을 출연시키려고 한 것이다. 이동관과 김재철이 엄청 친한 사이”라고 말했다. 국정원 국익전략실 소속 B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“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재철 사장이 친한 사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건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겠냐 추측했다”고 답했다.

## 이동관, 방송장악 과거 고백하고 사퇴해야!

검찰 수사보고서에는 ‘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’(2009.12.24.), ‘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’(2010.1.13.), ‘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’(2010.6.3.) 등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역시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작성을 요청한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.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“청와대에 홍보수석실이 신설된 2009.8.31. 이후로 홍보수석비서관 이동관일 때 집중(2009.8-2010.7)되어 있다”면서, “문건 내용으로 볼 때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됐던 것으로 보인다”고 판단했다. 검찰조차도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방송장악 문건의 배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.

이런 데도 이동관 내정자는 자신의 ‘방송장악’ 과거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.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 관심은 줄고 논란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. 명백한 오산이자, 언론과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이다. 이 정도 진실이 드러났다면, 스스로 나서 과거를 고백하고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.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. 2017년 11월, 해당 수사보고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작성될 당시,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.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고도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, 이 같은 방송장악 과거를 분명히 알고도 왜 방통위원장 임명을 고집하고 있는지, 직접 답해야 한다. 답을 할 자신이 없다면, 지금이라도 즉각 이동관 특보의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길 바란다. 그것이 국민의 심판과 파국을 면하는 길일 것이다.

2023년 7월 6일

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